

경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가 한국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신 형 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소장

경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가 한국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소장

01

경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제66차 'UN NGO 컨퍼런스'가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 하에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2,500명의 NGO 대표자, 학자,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4개 섹션의 대규모 라운드 테이블과 4개 트랙, 48개 세션의 소규모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6월 1일 컨퍼런스 최종 결과물을 담은 ‘경주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UN NGO 컨퍼런스’는 UN 창설 초기인 1946년 UN 총회에서 공보국(DPI)과 NGO의 UN 홍보를 위한 협력적 차원에서 처음 시작됐다.

올해로 제66번째, 햇수로는 70주년을 맞이할 만큼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지금은 전 세계 1,500여 개의 NGO 대표들이 모여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UN과 NGO가 협력해 전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



경주 'UN NGO 컨퍼런스' 폐막식 장면

의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 포럼으로까지 발전했다. 경주 컨퍼런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지난 1차에서 60차까지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UN NGO 컨퍼런스는 제61차 프랑스 파리, 제62차 멕시코 멕시코시티, 제63차 호주 멜버른, 제64차 독일 본, 제65차 미국 뉴욕에 열린 바 있다. 경주 컨퍼런스는 빈곤 종식 · 환경 보호 · 인권 보장 및 인류 공영 달성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원년에 맞춰 개최되었으며,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체결된 파리협약에 이어, 올해 2016년은 혁신적 변화의 시작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유엔 공보국과 NGO/공보국 집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를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참석자들은 각국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통용될 수 있는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의 메시지, 학습과 교육전략, 파트너십 및 개발을 위한 재정 조달을 포함한 정부 책임체제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경주 컨퍼런스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네 번째인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에 중점을 두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평등한 양질의 교육,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략 · 전문성 · 자원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성별 · 능력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영속시키며, 궁극적으로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기에 경주 컨퍼런스에서는 ① 정규교육, ② 비정규교육 및 훈련, ③ 옹호 및 홍보 전략이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UNESCO), 유니세프(UNICEF), UN아카데미 임팩트(UNA-I) 뿐만 아니라 UN 소속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의 전문가들이 교육 공동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논의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날인 6월 1일 폐회식에서 경주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세계시민의 염원과 포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세계 젊은이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불이익에 노출된 단체, 개인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경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형식 · 무형식 교육과정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경주 행동계획 작성을 위해 사전에 2개월 가량 온라인으로 전세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컨퍼런스 진행중에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 모인 다양한 영역의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6월 1일 새벽 최종본이 완성됐다. 경주 행동계획은 오는 6월 23일 뉴욕 UN 본부 회의에 상정 · 확정되고 이후 전세계 시민사회, UN 회원국, 유엔 소속기관 및 UN 사무총장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컨퍼런스를 유치한 경상북도는 회의 기간 내내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주 행동계획’ 초안에 새마을운동을 ‘성공적 시민운동’으로 규정하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새마을 운동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의 강제동원형 의식개조 운동으로 NGO 활동과 무관하다”며 강력 반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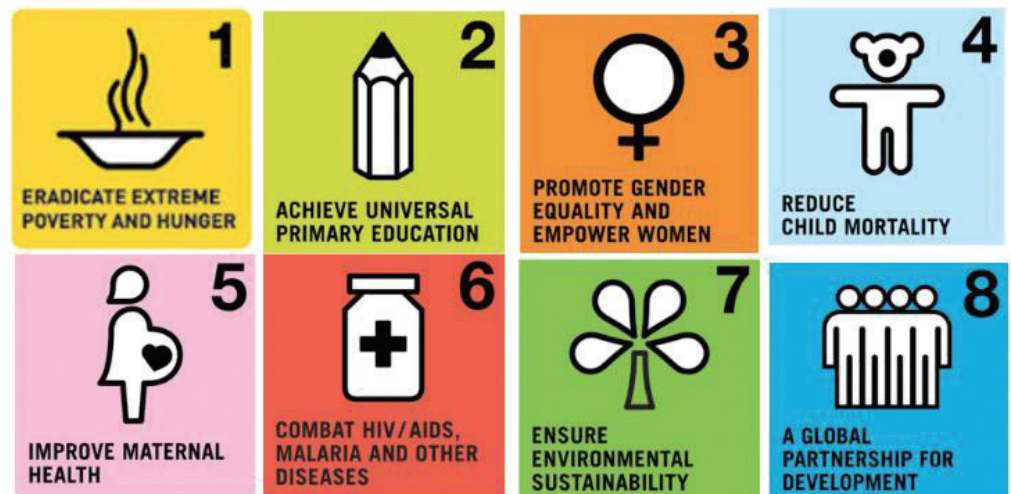
02

지속가능발전목표

● 새천년발전목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UN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8개 목표가 만들어졌다.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성 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산모 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⑧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



새천년발전목표의 8개 목표

2001년 제56차 UN 총회는 새천년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의 ‘로드맵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발전 관련 8개 과제를 새천년발전목표로 명명하고, 향후 UN 발전 틀 내에서 새천년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비록 새천년발전목표의 8개 목표를 약속한 대로 2015년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새천년발전목표는 단순한 양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 최초의 사례이자,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과 경험을 축적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구화(Globalization)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두가 하나의 지구적 울타리로 통합·동질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활동, 대중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구가 하나의 생활 단위로 바뀌고, 기존의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지구촌의 통합과 동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함께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약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2015년 9월 전 세계 UN 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새천년발전목표를 만들 때에는 UN 내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였고 목표가 제한적이어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목표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많은 UN의 회원국가들이 왜 약속이 필요한지, 또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새천년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과는 달랐다. 이 과정에는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 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

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천년발전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사회 발전 및 경제 성장, 환경 보존,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목표가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이미 1987년 이전부터 이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생활방식과 발전의 방향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는 제70차 UN 개발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전세계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다.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수립은 유엔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과제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의하는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을 중심으로 정부대표, 시민사회와 학자 등 여러 사람들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이전보다 향상된 목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세계 곳곳에서 가난을 퇴치하고 양성 평등을 달성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 단체를 결성하였다. ‘Beyond 2015’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2개의 국가의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action/2015’라는 캠페인 네트워크도 있다. ‘Beyond 2015’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에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action/2015’는 지속가능발전목표뿐만 아니라, 지구가 겪고 있는 가장 긴급한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한국 시민사회도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개발협력 분야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GCAP-Korea) 이렇게 세 개의 단체는 ‘Beyond 2015 Korea’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Beyond 2015 Korea’는 주요 유엔의 정책 문서를 함께 읽는 강독 프로그램, 공개 토론회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한국 안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KCOC, KoFID, GCAP-Korea, 세 개 단체가 ‘action/2015 Korea’를 결성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널리 알려왔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UN의 관련 문서 강독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2015년 9월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7개 목표 중 목표 1부터 목표 6까지는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 이 목표의 달성을 통해 빈곤 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목표 8부터 목표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경제규모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현재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

비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6번과 17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담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6번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17번 목표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7개 목표와 169개라는 세부 목표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 나라의 발전, 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중요한 목표이다. 지구상에서 빈곤, 불평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고 어떤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는 각자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받았다. 한국이 받은 도움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이웃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도 같이 늘어가야 한다. UN에서는 국민총생산(GNI)대비 0.7%를 개발도상국을 돕는 ODA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15년에 0.14%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는 UN의 권고사항인 0.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더욱 많은 ODA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야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받았던 도움을 갚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03

세계시민교육

● 세계교육포럼

경주에서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UN NGO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는 과정에는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었다. 1990년의 줌티엔, 2000년의 다카르, 그리고 2015년의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그것이다.

1990년 태국 줌티엔에서 155개국 150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교육포럼이 처음 열렸는데, 당시 모든 사람이 나이, 성, 계층,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세계 교육목표로 제시했다. 줌티엔 세계교육포럼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은 “10년 안에 초등교육의 보편화와 대대적인 문맹률 감소”에 적극 임하기로 동의하고 “교육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기본적인 학습은 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2000년에는 전세계에서 온 대표자들, 1100명이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하여, 줌티엔 세계교육포럼에서 결의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 이행에 있어 많은 국가들이 뒤쳐져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들은 다카르 협약(Framework for Action)을 맺고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목표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유네스코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을 조직화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다카르 협약에서 명시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6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②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교육 달성, ③ 생활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④ 성인 문해 증진, ⑤ 교육 양성평등 달성, ⑥ 교육의 질 향상”.

한편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2012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를 발족시킨 이후부터다. GEFI의 3대 우선순위는 ① 전아동 취학 달성, ② 교육의 질 향상, ③ 세계시민성

(Global Citizenship)의 함양이다. 반기문 총장은 GEFI의 추진 간사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이후 유네스코가 GEFI 추진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GEFI는 단순히 기존 국제사회의 교육개발의제를 환기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의 주요 목표, Post-2015 교육의제 세부목표, ‘새천년발전목표’를 이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전세계 교육지도자, 장관,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대표, 교사, 전문가, 그리고 민간부문이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및 교육 관련 ‘새천년발전목표’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15년간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5년 간의 새로운 교육목표(Post-EFA)를 채택하였다. 인천 세계교육포럼의 결과로서 각국은 국가 정책수립과 조정, 재정 마련 방안 계획 수립, 역량 강화와 교육 거버넌스 강화, 평가 체계 구축 등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여되는 책무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전세계 교육계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Post-2015’ 교육의제 이행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천 선언’에서 “세계시민 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명시되었다.



2014 인천 세계교육포럼

● 세계시민성

오늘날 세계는 전 지구적 해법을 요하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해법에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21세기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을 부여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평화롭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성의 함양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주의’의 정신,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는 지구촌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 또는 ‘보다 구체적인 시민의 역량과 도덕적 의무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지위’ 등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성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각종 분쟁을 대화 또는 타협과 같은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지구위원회가 발표한 지구헌장(Earth Charter)은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존중과 관심, ② 생태적 통합, ③ 사회·경제적 정의, ④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를 내세웠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옥스팜(Oxfam)은 세계시민을 ① 글로벌 이슈를 잘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②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③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을 다음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문화·종교·계급 등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 ② 보편적인 핵심 가치(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 철폐, 관용 등)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 ③ 비판적·창의적·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들, ④ 감정 이입,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 ⑤ 공감 또는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양한 언어·문화·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기술들(Non-cognitive Skills), ⑥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행동능력”

이상 세계시민성의 핵심역량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구촌 현실을 직시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 공동체 전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세계시민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지구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은 그 하위 구성 영역을 지식, 태도,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식의 영역에서는 세계의 상호연관성,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평등과 사회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평화에 관한 정보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이다. 태도의 영역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정의와 공정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다. 기술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청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사회조사방법, 민주적인 의사소통 기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정치참여 기술 등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갖춘 세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와 기술로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기초 역량, 시민성 역량, 민주주의 역량)의 큰 틀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과 민주시민교육의 이행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계시민교육 대두의 의미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평화롭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성의 함양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전 지구적으로 대두된 문제에 맞서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이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 교육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단일국가에 기반하는 국가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생 방식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진국을 포함한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며 범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인종·민족·문화의 다양성 심화는 단일국가 개념에 기반한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의 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물론 “세계시민성의 개념은 글로벌 경제체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서구의 이익을 인류공동체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시민성의 강조가 문화적 혼성화(hybridization)나 문화적 동형화(isomorphism)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하는 제국주의적 침탈의 또 다른 유형이다”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과는 별개로 세계시민교육이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을 초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교육, 인권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양성평등 교육, 환경 교육,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및 평화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변혁적 교육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요원해 보이는 세계공동체 구현과제를 교육을 통해 도모하면서 현시대와 지구 사회를 선

순환 경로로 바꾸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세계시민교육은 첫째, 학습자를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로 삼는 교육이다. 학습자가 지역적·세계적 문제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공정하고 관용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인 교육이다. 기성세대의 가치체계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학습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학습자는 주요 담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불평등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과정 중심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 교육이다. 단순히 ‘학교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수 지식을 토대로 실생활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적’ 교육을 강조한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참여지향적이며 실천지향적인 교육이다.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을 뛰어넘어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에 해당한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은 평생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모두를 통해 전개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04

한국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한국 교육은 공장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공장 인력을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평하며,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지 못하는 한국 특유의 획일적 관치교육의 한부를 콕 짚은 바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인종 • 민족 • 문화의 다양성 심화 등 단일국가 개념에 기반한 기존의 학교 교육의 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문제 풀이식 • 주입식 교육, 학력 만능주의 교육, 학벌주의 등의 교육 특징을 보이는 한국 학교교육의 현주소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인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 청소년과 시민의 육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한국 교육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 주입식 교육의 현실을 벗어나는 데 있어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임이 틀림없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 설정하고, 과정 중심적 • 문제해결 중심적 • 참여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바, 단순히 초 • 중등 교육의 교육과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과 차별화된다. 둘째, 토론과 체험 및 실천지향적인 수업에 적합한 혁신적인 세계시민교육의 강점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효과적인 맞춤형 시민교육활동을 전 학년에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류 등 지역적 • 세계적 이해와 연대를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 활동에 가장 유리한 접근방식이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의 지역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교육 과정과 교수방법 제공에도 효과적이다.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학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노력만으로 한

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개인적·조직적 역량 강화는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학교와 사회의 경계는 물론 사회의 각 부문, 즉 성, 계층, 연령,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연대와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시민교육과 성인 시민교육의 주요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시민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교육당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UN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개념들을 이른바 ‘정치적’이라거나 ‘이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시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에 따라 ‘민주주의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역시 같은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고 기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이 UN에 의해 전세계 각국의 주요 이행과제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을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세계시민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1)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2014)
- 2) UNESCO,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Paris 2015)
- 3) UNESCO, Incheon Declaration: Education 2030: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2015)
- 4) Oxfam,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ord 2006)
- 5) 문도운 외,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6) 박재창, 2012,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리북
- 7) 신형식, 2010,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방안』, 경기대학교.
- 8) 오수길 외, 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목표 연계』,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9) 한경구 외,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경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가 한국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6년 6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